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정착 지원 방안

정기용 | 주희진



전라남도





2024 정책이슈리포트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정착 지원 방안

저자 정기용 | 주희진

연구진

연구책임자 ·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 연구배경 및 목적

01 연구배경	4
02 연구목적 및 대상	7

II ▶ 전라남도 외국인 현황 및 정책 검토

01 전라남도 외국인 현황	8
02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외국인 정책	15
03 소결	26

III ▶ 외국인 우수인력 수요 및 정착 정책 검토

01 외국인 우수인력 수요 검토	29
02 외국인 우수인력 정착 정책 검토	39
03 소결	42

IV ▶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및 정착 사례

01 국내 사례	44
02 해외 사례	51
03 국내·외 사례 종합	57

V ▶ 결론

01 연구 요약	62
02 전라남도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정착을 위한 제언	64



참고문헌	74
------	----

I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전남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¹⁾ 2)

- 전라남도 인구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5년 1,908,996명에서 2020년 1,851,549명, 2023년에는 1,804,217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 특히 2017년까지는 매년 1만 명 이하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2018년 이후 2018년 13,454명, 2019년 14,225명, 2020년 17,196명, 2021년 18,846명으로 감소 인구의 폭이 증가하고 있음
- 전라남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감소와 함께 노인인구 증가로 201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전남의 합계출산율(2020년 1.15명, 2021년 1.02명, 2022년 0.97명, 2023년 0.97명) 및 출생아 수(2020년 1.15명, 2021년 1.02명, 2022년 0.97명, 2023년 0.97명)가 감소함
 - 반면, 노인인구(65세 이상)는 증가하여(2020년 435,880명, 2021년 445,198명, 2022년 457,481명, 2023년 470,874명) 2023년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전남 25.5%, 경북, 23.9%, 전북 23.4%, 강원 23.3% 등)(통계청, 2023a; 통계청 2024)
- 청년인구 역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순유출이 지속되어 감소하고 있음
 - 전남의 청년인구 수는 2020년 568,169명에서 2023년 526,217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서 2023년까지 전남으로 전입된 청년인구는 319,612명인 반면, 전출된 청년인구는 350,265명으로 전남의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음³⁾

1) 인구 현황은 매년 12월 말 기준

2)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https://jumin.mois.go.kr/>)

- 전남은 합계출산율, 출생아 수,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⁴⁾이 2021년 10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⁵⁾
 -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되며 2021년 10월 전국 89개 시·군·구가 최초로 지정됨
- 전남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을 2024년 첫 번째 도정 운영 전략으로 선정하고 인구청년이민국(TF)을 신설함(전라남도, 2024)
 -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 위기 극복 혁신 대책, 생활인구 육성 및 우수 외국인 유치 등을 추진함
 - 특히, 전남은 지역특화형 비자⁶⁾ 전환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모집 등 외국인 유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인정책 환경 변화

-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 2016년 2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체류외국인 증가 추세가 감소하였으나, 향후에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체류외국인은 2016년 204.9만 명에서 2019년까지 252.4만 명으로 증가 후 2021년 195.6만 명으로 감소한 뒤 2023년 250.7만 명으로 다시 증가함(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3) 자료 : 전남도청 주민등록·추계인구 홈페이지(<https://www.jeonnam.go.kr/M4695/boardList.do?menuId=jeonnam0508070000>)
 4) 전남 인구감소 지정 16개 시·군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5)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6) 지역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비자로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는 제도임.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우수한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됨(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체류외국인 증가와 함께 등록외국인⁷⁾도 2015년 114.3만 명에서 2019년 127.1만 명, 2023년 134.8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남의 등록외국인은 2015년 30,566명, 2019년 34,638명, 2023년 49,11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완화 및 지연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2023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추진함(법무부, 2023)

□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정책 설계 필요

-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전남은 기존 산업인 철강·조선·석유화학·농업·수산업 등과 항공 및 우주·소재·부품·첨단 생명공학·신재생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이 심화됨
 - 특히 중소제조업 및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됨
- 전남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서 전남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정책 설계가 필요함
 - 국가 및 지역 간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정착 방안 설계가 필요함

7) 등록외국인이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에 등록된 외국인을 의미함(「출입국관리법」 제31조)

2. 연구목적 및 대상

□ 연구목적

- 전라남도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 정착 방안을 제시함
 - 전남의 산업별 및 제조업 분야별 고용현황, 빈일자리 비율 등을 검토하여 전남 외국인 우수인력의 수요를 도출함
 - 인력 수요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F-2-R, F-4-R)를 활용한 외국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 이민자 체류실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이주민 정착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전남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중앙정부 및 타 광역시·도의 사례검토를 통해 전남의 외국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함
 - 중앙부처 중심의 외국인 정책에서 광역자치도의 역할 및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출입국관리법 등의 법률(안)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 연구대상

- 본 연구의 대상인 외국인 우수인력이란 현행 비자체계에 따른 전문외국인력(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중 특정활동(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인력을 의미함
 - 특히,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력(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 중 연간소득, 기술 숙련도, 한국어 능력 등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 장기체류 및 가족 초청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외국인유학생(D-2)의 지역정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함

II 전라남도 외국인 현황 및 정책 검토

1. 전라남도 외국인 현황⁸⁾

□ 등록외국인 현황⁹⁾

- 전국의 등록외국인은 2019년 1,271,8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45%였으나, 2023년에는 1,348,62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63%로 증가함
 - 2020년 및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23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425,629명(3.12%)인 경기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252,765명, 2.69%), 경남(89,312명, 2.75%), 충남(85,215명, 4.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49,110명(2.72%)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7번째로 나타남
 - 전체 등록외국인은 경기가 가장 많고 서울, 경남 순이지만, 전체 인구 중 등록외국인 비율은 충남이 4.0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제주(3.77%), 경기(3.12%), 충북(3.07%) 순으로 나타남
 - 전남은 2.72%로 17개 광역시·도 중 등록외국인 비율이 5번째로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2023년 등록외국인은 서울 및 제주를 제외하고 15개 광역시·도에서 증가함
 - 서울은 29,111명, 제주는 212명이 감소하여 전체 인구 중 등록외국인 비율이 감소하였으며(서울, 2.90% → 2.69%, 제주, 3.83% → 3.77%), 경기는 등록외국인이 11,311명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감소함(3.13% → 3.12%)

8) 현황 자료는 매년 12월 말일 기준

9)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

- 2019년 대비 2023년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남으로 14,540명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전남으로 2019년 34,638명(1.85%)에서 2023년 49,110명(2.72%)으로 14,472명이 증가함
 - 특히, 전체 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비율이 충남은 0.67% 증가하였으나, 전남은 0.87%가 증가하여 17개 광역시·도 중 등록외국인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함

표 1 광역시·도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 명, %)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1,271,807(2.45)	1,145,540(2.21)	1,093,891(2.12)	1,189,585(2.31)	1,348,626(2.63)
서울	281,876(2.90)	242,623(2.51)	226,569(2.38)	239,297(2.54)	252,765(2.69)
부산	45,999(1.35)	40,366(1.19)	39,420(1.18)	42,863(1.29)	49,090(1.49)
대구	30,191(1.24)	27,798(1.15)	27,230(1.14)	29,568(1.25)	33,305(1.40)
인천	72,259(2.44)	67,648(2.30)	66,364(2.25)	71,849(2.42)	81,016(2.70)
광주	23,825(1.64)	21,323(1.47)	20,934(1.45)	22,967(1.60)	25,348(1.79)
대전	19,109(1.30)	16,895(1.15)	17,292(1.19)	20,594(1.42)	23,384(1.62)
울산	20,450(1.78)	17,884(1.57)	16,827(1.50)	18,379(1.65)	23,620(2.14)
세종	5,700(1.67)	5,076(1.43)	4,884(1.31)	5,336(1.39)	5,786(1.50)
경기	414,318(3.13)	380,144(2.83)	360,412(2.66)	382,865(2.82)	425,629(3.12)
강원	19,069(1.24)	17,332(1.12)	17,384(1.13)	20,472(1.33)	23,484(1.54)
충북	40,714(2.54)	37,060(2.32)	36,045(2.26)	41,270(2.59)	48,866(3.07)
충남	70,675(3.33)	64,546(3.04)	62,578(2.95)	71,159(3.35)	85,215(4.00)
전북	33,074(1.82)	31,288(1.73)	30,331(1.70)	34,941(1.97)	40,215(2.29)
전남	34,638(1.85)	32,906(1.78)	32,656(1.78)	38,988(2.14)	49,110(2.72)
경북	58,119(2.18)	52,469(1.99)	51,100(1.95)	57,055(2.19)	67,025(2.62)
경남	76,123(2.26)	67,239(2.01)	63,148(1.91)	70,390(2.15)	89,312(2.75)
제주	25,668(3.83)	22,943(3.40)	20,717(3.06)	21,592(3.18)	25,456(3.77)

주 : 괄호 안의 내용은 전체 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비율을 의미함

자료 : 국가통계포털(인구수-통계청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시군구별 및 국적(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재구성)

- 2023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 중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영암군으로 등록외국인은 총 8,221명이며, 전라남도 전체 등록외국인 중 16.74%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여수시(6,405명, 13.04%), 목포시(4,191명, 8.53%), 나주시(3,921명, 7.98%), 완도군(3,907명, 7.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2023년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영암군으로 3,705명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완도군(1,738명), 여수시(1,712명), 나주시(1,140명), 목포시(87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법무부, 2024)

표 2 전라남도 시·군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 명, %)

지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34,182(100.00)	32,906(100.00)	32,656(100.00)	38,988(100.00)	49,110(100.00)
강진군	456(1.33)	445(1.35)	421(1.29)	504(1.29)	570(1.16)
고흥군	1,059(3.10)	1,001(3.04)	949(2.91)	1,383(3.55)	1,689(3.44)
곡성군	489(1.43)	475(1.44)	413(1.26)	482(1.24)	508(1.03)
광양시	1,687(4.94)	1,563(4.75)	1,495(4.58)	1,761(4.52)	2,104(4.28)
구례군	221(0.65)	206(0.63)	188(0.58)	205(0.53)	210(0.43)
나주시	2,781(8.14)	2,638(8.02)	2,641(8.09)	3,097(7.94)	3,921(7.98)
담양군	998(2.92)	919(2.79)	868(2.66)	1,062(2.72)	1,247(2.54)
목포시	3,314(9.70)	3,134(9.52)	3,053(9.35)	3,508(9.00)	4,191(8.53)
무안군	1,628(4.76)	1,498(4.55)	1,583(4.85)	1,956(5.02)	2,083(4.24)
보성군	488(1.43)	439(1.33)	411(1.26)	473(1.21)	799(1.63)
순천시	2,124(6.21)	2,049(6.23)	2,134(6.53)	2,513(6.45)	2,806(5.71)
신안군	828(2.42)	764(2.32)	734(2.25)	887(2.28)	1,210(2.46)
여수시	4,693(13.73)	4,624(14.05)	5,215(15.97)	5,684(14.58)	6,405(13.04)
영광군	921(2.69)	927(2.82)	877(2.69)	985(2.53)	1,121(2.28)
영암군	4,516(13.21)	4,169(12.67)	4,119(12.61)	5,182(13.29)	8,221(16.74)
완도군	2,169(6.35)	2,212(6.72)	2,144(6.57)	2,848(7.30)	3,907(7.96)
장성군	1,097(3.21)	993(3.02)	923(2.83)	1,030(2.64)	1,135(2.31)
장흥군	592(1.73)	534(1.62)	491(1.50)	543(1.39)	634(1.29)
진도군	1,517(4.44)	1,432(4.35)	1,322(4.05)	1,643(4.21)	2,070(4.22)
함평군	699(2.04)	635(1.93)	612(1.87)	769(1.97)	971(1.98)
해남군	1,452(4.25)	1,412(4.29)	1,290(3.95)	1,579(4.05)	2,286(4.65)
화순군	909(2.66)	837(2.54)	773(2.37)	894(2.29)	1,022(2.08)

주 : 괄호 안의 내용은 전체 등록외국인 대비 해당 지역의 등록외국인 비율을 의미함
 자료 : 법무부(2024)

□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 2023년 기준 전라남도 등록외국인 총 49,110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총 26,427명으로 전체 등록외국인 중 53.81%를 차지함
 - 외국인근로자 중 전문인력은 2,564명(5.22%), 비전문인력은 23,862명(48.59%)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기타(방문동거, 거주, 동반, 영주, 관광취업 등) 12,159명(24.76%), 결혼이민자(5,614명, 11.43%), 외국인유학생(4,911명, 10.00%) 순으로 나타남

표 3 전라남도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2023년)

(단위 : 명, %)

전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기타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49,110	2,564(5.22)	23,862(48.59)	5,614(11.43)	4,911(10.00)	12,159(24.76)

주 : 1. 괄호 안의 내용은 전체 등록외국인 대비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비율을 의미함
 2. 전문인력: 회화지도(E-2), 연구(E-3),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3. 비전문인력: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4. 결혼이민자: 결혼이민(F-6)
 5. 외국인유학생: 유학(D-2), 일반연수(D-4)
 6. 기타: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 관광취업(H-1) 등
 자료 : 전라남도 내부자료(2024)

- 현행 비자체계에 따른 전라남도 세부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 49,110명 중 비전문취업(E-9)이 19,544명(39.80%)으로 가장 많음
 - 다음으로는 결혼이민(F-6, 5,614명, 11.43%), 선원취업(E-10, 3,762명, 7.66%), 방문동거(F-1, 3,676명, 7.49%), 계절근로(E-8, 3,019명, 6.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2023년 전체 등록외국인은 14,472명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등록외국인 중 비전문인력(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이 5,399명이 증가함
 - 특히, 비전문취업(E-9)은 2019년 대비 2023년 5,048명이 증가하였으며, 계절근로(E-8)는 2022년 794명으로 최초 집계한 이후 2023년 3,019명으로 2,225명이 증가하였으며, 전문인력 중 특정활동(E-7)도 1,782명이 증가함

표 4 전라남도 세부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 명, %)

체류자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34,638	32,906	32,656	38,988	49,110
D2(유학)	1,392(4.02)	1,360(4.13)	1,608(4.92)	1,890(4.85)	2,867(5.84)
D4(일반연수)	1,046(3.02)	881(2.68)	1,223(3.75)	1,715(4.40)	2,044(4.16)
D6(종교)	52(0.15)	35(0.11)	46(0.14)	45(0.12)	43(0.09)
D8(기업투자)	84(0.24)	90(0.27)	109(0.33)	188(0.48)	199(0.41)
D9(무역경영)	98(0.28)	103(0.31)	132(0.40)	120(0.31)	100(0.20)
D10(구직)	63(0.18)	82(0.25)	92(0.28)	188(0.48)	322(0.66)
E2(회화강사)	549(1.58)	381(1.16)	468(1.43)	466(1.20)	450(0.92)
E3(연구)	40(0.12)	39(0.12)	54(0.17)	76(0.19)	88(0.18)
E6(예술흥행)	51(0.15)	38(0.12)	32(0.10)	27(0.07)	35(0.07)
E7(특정활동)	209(0.60)	248(0.75)	473(1.45)	744(1.91)	1,991(4.05)
E8(계절근로)*	-	-	-	794(2.04)	3,019(6.15)
E9(비전문취업)	14,496(41.85)	13,266(40.31)	12,291(37.64)	15,835(40.62)	19,544(39.80)
E10(선원취업)	2,715(7.84)	2,851(8.66)	2,992(9.16)	3,477(8.92)	3,762(7.66)
F1(방문동거)	3,962(11.44)	3,205(9.74)	2,998(9.18)	3,361(8.62)	3,676(7.49)
F2(거주)	364(1.05)	363(1.10)	390(1.19)	377(0.97)	598(1.22)
F3(동반)	214(0.62)	221(0.67)	265(0.81)	392(1.01)	545(1.11)
F5(영주)	1,749(5.05)	1,821(5.53)	1,872(5.73)	1,910(4.90)	1,973(4.02)
F6(결혼이민)	5,470(15.79)	5,546(16.85)	5,433(16.64)	5,427(13.92)	5,614(11.43)
G1(기타)	769(2.22)	848(2.58)	769(2.35)	1,016(2.61)	1,348(2.74)
H2(방문취업)	1,252(3.61)	974(2.96)	747(2.29)	590(1.51)	556(1.13)
그 외 기타	63(0.18)	554(1.68)	662(2.03)	350(0.90)	336(0.68)

주 : 계절근로자 2022년 최초집계
 자료 : 전라남도 내부자료(2024)

- <표 3>에 따른 2023년 기준 전라남도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중 가장 규모가 큰 비전문인력(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중 비전문취업(E-9)을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업(E-9-3), 어업(E-9-4)으로 구분(기타 제외)하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비전문취업(E-9) 총 19,544명 중 제조업(E-9-1)이 7,786명(3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어업(E-9-4, 7,384명, 37.78%), 농업(E-9-3, 3,591명, 18.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시·군별 비전문인력 중심의 등록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외국인의 수가 가장 많은 영암군은 비전문취업(E-9)이 3,625명(44.09%)으로 나타났으며, 선원취업(E-10)은 내륙 지역으로 7명(0.09%)으로 나타남
 - 비전문취업(E-9)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E-9-1)이 3,370명으로 영암군 비전문취업 3,625명 중 92.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암군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여수시는 선원취업(E-10)이 2,077명(32.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전문취업(E-9)(1,673명, 26.12%)으로 나타남
 - 비전문취업(E-9)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E-9-1, 571명)보다 어업(E-9-4, 951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 시·군 중 여수시 및 목포시는 선원취업(E-10)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시·군에서는 제조업(E-9-1)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법무부, 2024)

표 5 전라남도 시·군별 세부 체류자격별(비전문인력) 등록외국인 현황

(단위 : 명, %)

지역	총합계	E-9(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전체	E-9-01 (제조업)	E-9-02 (건설업)	E-9-03 (농업)	E-9-04 (어업)		
총계	49,110	19,544(39.80)	7,786(39.83)	695(3.55)	3,591(18.37)	7,384(37.78)	3,762(7.66)	556(1.13)
강진군	570	274(48.07)	32(11.68)	23(8.39)	148(54.01)	70(25.55)	0(0.00)	7(1.23)
고흥군	1,689	1,017(60.21)	124(12.19)	2(0.20)	153(15.04)	737(72.47)	4(0.24)	7(0.41)
곡성군	508	239(47.05)	116(48.54)	13(5.44)	91(38.08)	19(7.95)	0(0.00)	9(1.77)
광양시	2,104	529(25.14)	436(82.42)	18(3.40)	72(13.61)	1(0.19)	20(0.95)	51(2.42)
구례군	210	56(26.67)	28(50.00)	3(5.36)	25(44.64)	0(0.00)	0(0.00)	8(3.81)
나주시	3,921	1,414(36.06)	549(38.83)	118(8.35)	700(49.50)	26(1.84)	0(0.00)	27(0.69)
담양군	1,247	734(58.86)	344(46.87)	25(3.41)	357(48.64)	3(0.41)	0(0.00)	5(0.40)
목포시	4,191	514(12.26)	256(49.81)	50(9.73)	0(0.00)	201(39.11)	1,125(26.84)	74(1.77)
무안군	2,083	702(33.70)	248(35.33)	91(12.96)	324(46.15)	39(5.56)	48(2.30)	15(0.72)
보성군	799	242(30.29)	67(27.69)	2(0.83)	153(63.22)	18(7.44)	0(0.00)	0(0.00)
순천시	2,806	472(16.82)	271(57.42)	83(17.58)	92(19.49)	20(4.24)	10(0.36)	47(1.67)
신안군	1,210	731(60.41)	19(2.60)	18(2.46)	66(9.03)	628(85.91)	108(8.93)	3(0.25)
여수시	6,405	1,673(26.12)	571(34.13)	100(5.98)	32(1.91)	951(56.84)	2,077(32.43)	28(0.44)
영광군	1,121	466(41.57)	99(21.24)	20(4.29)	117(25.11)	229(49.14)	111(9.90)	35(3.12)
영암군	8,221	3,625(44.09)	3,370(92.97)	34(0.94)	186(5.13)	29(0.80)	7(0.09)	158(1.92)
완도군	3,907	2,418(61.89)	35(1.45)	0(0.00)	5(0.21)	2,375(98.22)	132(3.38)	20(0.51)
장성군	1,135	638(56.21)	469(73.51)	14(2.19)	137(21.47)	12(1.88)	0(0.00)	5(0.44)
장흥군	634	292(46.06)	106(36.30)	4(1.37)	120(41.10)	62(21.23)	7(1.10)	10(1.58)
진도군	2,070	1,423(68.74)	22(1.55)	8(0.56)	50(3.51)	1,343(94.38)	102(4.93)	7(0.34)
함평군	971	534(54.99)	248(46.44)	35(6.55)	218(40.82)	28(5.24)	0(0.00)	3(0.31)
해남군	2,286	1,122(49.08)	186(16.58)	13(1.16)	343(30.57)	580(51.69)	11(0.48)	21(0.92)
화순군	1,022	429(41.98)	190(44.29)	21(4.90)	202(47.09)	13(3.03)	0(0.00)	16(1.57)

주 : 괄호 안의 내용은 각 지역의 전체 등록외국인 대비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비율을 의미함
 자료 : 법무부(2024)

2. 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외국인 정책

1)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¹⁰⁾

□ 개요

- 외국인 정책은 국경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사회통합과 국적부여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을 의미함
 - 대한민국에 이주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사회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 거주에 대한 여러 제반사항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정책임
 - 이전 기본계획에서는 해외이민과 이민정책의 혼동을 우려하여 외국인 정책과 이민정책을 구분하였으나, 제4차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정책'을 '이민정책'으로 전환함

그림 1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변화



자료 : 법무부(2023),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은 개방(해외 우수인재 확보 및 인력공급), 통합(이민자가 적응·자립하는 사회통합), 안전(국경관리 및 체류관리 체계 선진화), 인권(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협력(국제협력, 중앙-지자체-시민사회 협력)을 중심으로 구조화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한 균형 있는 이민정책 발굴을 시도함
- 통합과 개방 영역에 예산과 정책을 집중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경제발전을 강조하였으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인권 분야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성장함
 - 하지만 인권 및 안전은 중요성 대비 가장 낮은 예산과 과제가 할당됨

10) 자료 : 법무부(2023),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

- 이를 기반으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 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라는 비전을 토대로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5대 분야의 정책목표를 설정함
 - 제4차 기본계획은 기존 정책과 유입 관점, 정주 및 정착 방식, 추진 체계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차별성을 강화함
 - 첫째, 외국인 유입의 관점에서는 단순 노동력 충원 기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착·정주 여건 및 사회통합 요소를 고려하며 전문·숙련 인력 및 유학생 유치를 통해 국가성장 동력으로 전환함
 - 둘째, 외국인 정착 방식은 기존의 미흡했던 정주 및 정착 유도 방안을 개선하여 사회통합을 고려한 정착 및 정주를 유도하며, 국민과 외국인이 이해와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추진과 함께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함(불법체류 단속 등)
 - 셋째, 추진 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의 단편적 이민정책 운영을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함

□ 주요 추진 과제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는 경제(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사회 구현), 통합(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인권(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협력/인프라(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로 구성됨
- 5대 정책목표별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제는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구축,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성장으로 구성됨
 - 둘째, 안전은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로 구성됨
 - 셋째, 통합은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으로 구성됨

- 넷째, 인권은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으로 구성됨
- 다섯째, 협력/인프라는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구축,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로 구성됨

표 6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분야 및 정책 목표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구축
중점 과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구축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자료 : 법무부(2023),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수의 부처가 해당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장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 정책목표 경제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과기부) : 우수 해외 연구자(반도체, AI 등)를 유치하여 국가 연구 경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외국인 우수 연구자 대상 사이언스 카드 발급 및 우대 제도 확대를 통해 전략적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 추진
 -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중기부, 교육부) : 개도국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분야 교육과정을 SW 제공 후 국내 스타트업으로 취업 연계 추진

-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체계 개선(산업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 구인난이 심한 산업에 안정적인 숙련기능인력(E-7-4) 공급 지원을 위해 산업별 별도 쿼터 신설 및 점진적 확대 추진
- 조선업 등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우수시설 교육기관 연수생(D-4-6)의 E-7 전환 프로그램 신설
- 정책목표 안전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국세청) :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등 신고 시 세무관서 등에 제출한 자료를 출입국관서와 공유하도록 하여 불법 고용 이득 차단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복지부) :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을 규정하여 의료 목적을 위한 입국 방지 추진(법령 개정 병행)
 -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해수부) : 항만을 통한 밀입국 등 범죄단속 및 첩보수집 강화를 위한 수사전담반 운영, 국제여객선 및 여객터미널 테러 발생 대응능력 향상 및 관계기관 협조 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 정책목표 통합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여가부) :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이민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주 유관기관, 관련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협업을 통한 소통 지향적 프로그램 개발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 기반 마련(문체부) :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내 인식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환경 변화 및 다양성 확산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방통위) 외국인 대상 통신서비스를 활용하여 피해예방 교육 및 재난·재해 대응성 향상
- 정책목표 인권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고용부) : 외국인 여부 및 체류자격의 차별 없이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전용보험제도 운영,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지속 실시

- 편견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방송위) : 방송사 심의 책임자 회의를 통해 차별적 방송관련 심의규정 및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방송사 자체 심의 기능 강화 적극 유도
- 정책목표 협력/인프라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농식품부·해수부·고용부)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분야 확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운영상황 점검 개선안 발굴
 -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통계청) : 시의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주기 단축,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개선 및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반영을 통해 이민정책 데이터 인프라 구축
 -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외교부) : 이민 관련 국제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이민 당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표 7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정책목표	주요 사업
경제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SW 전문인력 취업 연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공급 체계 개선
안전	불법고용업체에 대한 세무 감독 및 정보 공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통합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정책 기반 마련,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인권	차별 없는 임금과 퇴직금 보장, 편견 차별방지를 위한 방송심의 기능 강화
협력/ 인프라	계절근로 제도 개선 부처 간 협력 강화,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다자간 국제협력 체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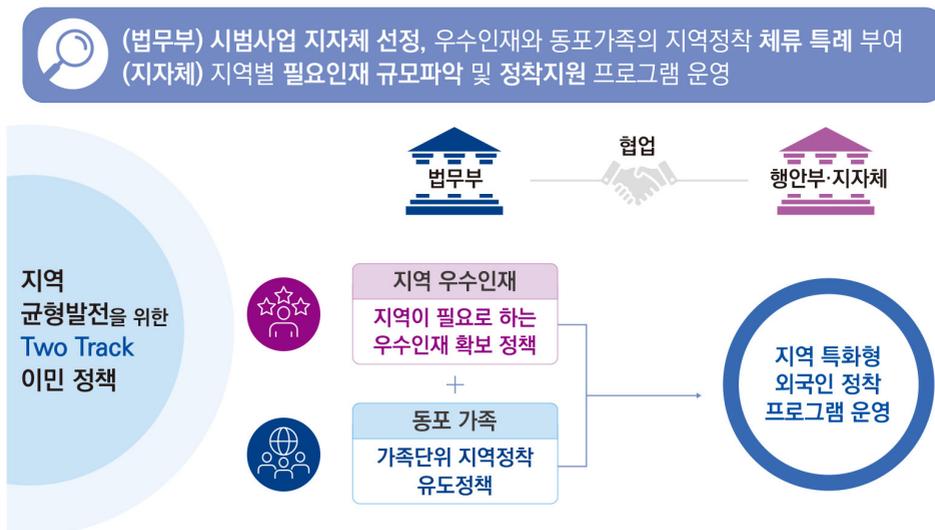
자료 : 법무부(2023),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 지역특화형 비자 및 광역비자

□ 지역특화형 비자¹¹⁾

- 지역특화형 비자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 경제력 저하, 인구 사회적 유출 등의 사회적 문제를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입국 및 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주민 간 통합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의미함
 - 지역특화형 비자는 정식 사업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대한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인구유입 등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림 2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념도



자료 : 법무부(202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고문

- 지역특화형 비자의 사업 내용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유형 1은 지역 우수인재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는 (지역)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11) 자료 : 법무부(2022a),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고문

- 유형 2는 동포가족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인구감소 지역 거주 외국국적동포와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체류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 유형 1 지역 우수인재 사업은 법무부 및 지자체가 지역 현황 맞춤형 비자를 설계함
 - 법무부는 외국인의 기본요건을 설정 및 비자를 발급하며,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주민 확보 사업을 제안함
 - 우수인재의 기본요건으로는 한국어 능력, 법질서 준수, 소득/학력, 취업, 기간 등의 요건이 있음
 - 우수인재 기본요건 및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추가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거주(F-2)' 체류자격의 변경이 허용되며, 거주(F-2) 자격 취득 후 5년 간 인구감소 지역 실거주 및 근무를 조건으로 허가하며, 가족 초청이 가능함

표 8 지역특화 비자사업 우수인재 기본요건

구분	기본요건
한국어능력	토픽(TOPIK) 3급(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소득 학력	①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70%('21년 2,833만 원)이거나 ② 학력이 학사 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일 것
취·창업	취업이나 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체류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창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적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 중에서 절반을 넘지 않을 것

자료 : 법무부(2022),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 공고문

- 유형 2 동포 가족 사업은 법무부는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동포 가족 주민의 정착 지원 계획안을 수립함
 -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동포와 자녀 재외동포(F-4) 자격변경으로 '최소 2년 이상 해당지역 실거주'를 허가요건으로 동포와 자녀는 재외동포(F-4), 非동포 배우자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함

- 둘째,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 완화로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에 '인구감소지역 재외동포(F-4) 취업활동 허가'(신설 예정)를 받은 경우, 제한없이 인구감소지역 내 취업활동 가능함
- 셋째,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재외동포(F-4)와 동거하는 배우자(F-1)를 대상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활동이 가능함
- 넷째, 영주(F-5) 자격요건 완화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인구감소지역 2년 이상 실거주한 동포를 대상으로 영주(F-5-6)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이 완화됨(국민총소득(GNI) 이상 → GNI 70% 이상)
-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1차는 15개 지역(총 쿼터 850명)을 대상으로, 추가는 13개 지역(총 쿼터 650명)을 대상으로 총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 제1차 공모 시범지역은 충청남도(보령시, 예산군), 전라북도(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라남도(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경상북도(영주시, 의성군, 영천시, 고령군), 경기도(연천군), 경상남도(고성군)이며,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1년 간 실시함
 - 제2차 공모 시범지역은 부산광역시(서구, 동구, 영도구),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전라북도(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고흥군, 보성군), 경상북도(성주군), 대구광역시(남구), 경기도(가평군)이며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9개월 간 실시함 (법무부, 20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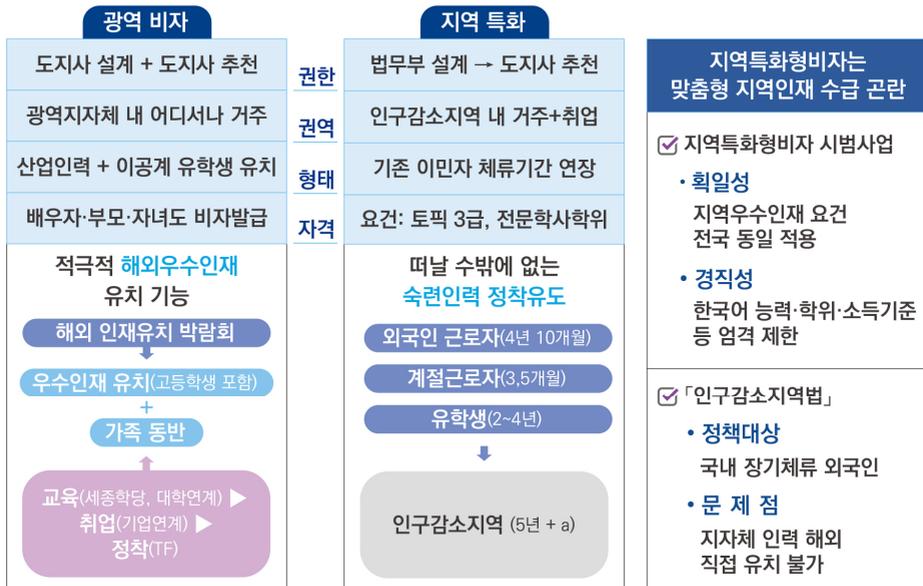
□ 광역비자¹²⁾

- 광역비자란 법무부의 비자발급 및 체류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가 넘겨 받아 외국인근로자, 이공계 유학생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인력 및 우수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하여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의미함
 - 외국인이 지방에 정착하는 것을 막은 사증 문제를 해결하고 중앙정부 및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착을 지방이 주도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2) 자료 : 류형철(2023). 광역비자 도입의 실효적 추진방안. 경북연구원 CEO BRIEFING. 제701호.

- 광역비자는 2022년 7월 지방시대 준비위원회에서 광역비자 도입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경상북도가 지방주도형 외국인 정책 모델로 전국에서 최초로 제안함
 -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 등이 2022년 12월 29일 「출입국관리법」(의안번호 211924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2119246)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비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
 - 공통점으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며 단기순환 인력정책에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며, 1인 노동자 중심의 인력정책에서 가족이민을 유도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차이점은 비자발급 권한, 공간 권역, 비자의 형태 및 지원자격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그림 3 광역비자-지역특화형 비자 비교



자료 : 류형철(2023: 4)

3) 전라남도 외국인 정책¹³⁾

□ 개요

- 전라남도는 2024년 첫 번째 도정 운영 전략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인구청년이민국의 신설과 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함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목표로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이민정책을 추진함
- 이와 함께,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가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 선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①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②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¹⁴⁾ 전남 유치 ③ 외국인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추진함
 -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은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실을 3급 상당의 국으로 상향하여 1국 3과로 확대(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함
 - 청년 외에도 외국인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추진이 가능해짐
 - 이와 함께, 전남은 지역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비자 도입을 제안하는 등 이민정책 선도를 추진함
- ① 및 ② 정책은 조직 개편을 통한 정책이며, 외국인과 상호작용하는 정책은 ③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인 주민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주요 외국인 정책

- 전라남도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 지원정책과 다문화 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외국인 지원정책으로는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노동관련 법률 상담 지원, 외국인주민 모국어뉴스 서비스 지원,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추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 공모사업,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운영,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숙련기능인력(E-7-4) 지자체 추천제도, 전라남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등이 있음

13) 자료 : 전라남도(2024). 전라남도 주요 업무계획 2024. 전라남도 내부자료

14)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국익의 관점에서 범정부 자원의 통일된 이민정책을 설계하는 부처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다문화 지원정책으로는 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등이 있음

표 9 전라남도 주요 외국인 정책

구분	사업명	내용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주민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현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과 다문화 포용 등을 위한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운영,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개최, 외국인주민 법률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노동관련 법률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적·구조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으로 권리구제 및 부당대우 문제 해결 · 도내 거주 권역별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노동 관련 법률(출장)상담 및 통·번역 지원
	외국인주민 모국어 뉴스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문화 차이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주민에게 모국어 뉴스를 제작·송출하여 알 권리 충족 및 정보격차 해소 · 한 주간 보도된 지역의 주요 뉴스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작, 도내 전 권역 송출, 각종 외국인 지원 및 복지제도, 법규·생활 정보 제공
외국인 지원 정책	외국인주민 도정 모니터링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주민에게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을 통한 도정 참여 유도 및 정책 수요 발굴 · 일상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 다문화 관련 정책 제안, 현장 모니터링 ·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통한 도내 외국인 지원사업 및 정책 홍보·전파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주민에게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전남형 외국인주민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지역특화형 비자(F2, F4)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F-2)와 외국국적동포(F-4)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비자 발급 및 특례 제공 ·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계획 수립 및 사업 기간 중 집중 홍보
	숙련기능인력 (E-7-4) 지자체 추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E-7-4 비자 개선방안으로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에게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포인트 획득 시(200점 이상/300점 만점) E-7-4 비자로 전환 · (유형1)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만족하는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 취업 및 5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거주(F-2)비자 발급 · (유형2)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에게 인구감소지역 이주 및 거주 조건으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및 특례 제공

구분	사업명	내용
다문화 가족지원 특성화사업	가족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교류 소통공간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지원(기초학습지원,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등)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특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 지리적 접근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단계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 문제해결 통번역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 성장 기반 마련 •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중언어 부모·가족 코칭, 이중언어 학습 지원 등)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 결혼이민자 수요에 맞는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
다문화 지원 정책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가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 취학 전 아동에게 이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 기여 • 아동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수업실시 전통의상체험, 음식만들기, 민요, 동요 배우기, 인사말 등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엄마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과정 교육을 지원하여 자녀들에게 학습지도, 학교 적응 등 다문화 엄마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정착 기반 마련 • 초등학교 7개 과정 교육, 졸업 후 가정학습 지도 실시, SNS를 통한 실시간 교육정보 제공 등
	결혼이주여성 모국어 상담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주여성 상담사의 공감되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가정해체 위기상황 예방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다문화 가족상담, 가족위기상담, 생활정보제공, 유관기관 자원연계 등상담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대상 1인당 300천 원 지원 	

자료 : 전라남도 내부자료(2024)

3. 소결

- 전국 등록외국인은 코로나19의 영향인 2020년 및 2021년을 제외하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3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 충남 순으로 나타남
- 전남은 17개 광역시·도 중 등록외국인 수가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비율은 5번째로 높게 나타남

- 특히, 2019년 대비 2023년 전담은 증남 다음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등록외국인 비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크게 증가함(1.85% → 2.72%)
- 2023년 기준 전남 22개 시·군 중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영암군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여수시, 목포시, 나주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전남 등록외국인 49,110명 중 외국인근로자는 26,427명(53.81%)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 중 비전문인력(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이 23,862명(48.59%)으로 나타남
 - 비전문인력(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중 비전문취업(E-9)이 19,544명(3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선원취업(E-10, 3,762명, 7.66%), 방문취업(H-2, 556명, 1.13%) 순으로 나타남
 - 비전문취업(E-9)을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업(E-9-3), 어업(E-9-4)으로 구분하면, 제조업(E-9-1, 7,786명, 39.83%), 어업(E-9-4, 7,384명, 37.78%), 농업(E-9-3, 3,591명, 18.37%) 순으로 나타남
- 전남 22개 시·군은 지역의 주요 산업 특성에 따라 체류자격별 외국인근로자 비율의 차이가 나타남
 - 영암군은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수시 및 목포시는 어업과 관련된 외국인근로자가 많고 제조업 관련 외국인근로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 국가'라는 비전을 토대로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 5대 분야의 정책목표를 설정함
 - 경제 분야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안전 분야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 사회 구현, 통합 분야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인권 분야는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협력/인프라 분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을 토대로 중점과제를 추진함
- 전라남도 2024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및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추진함
 - 이와 함께, 외국인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외국인 주민 정주환경 조성 개선 등을 추진함

- 특히, 전라남도는 지역특화 비자 시범사업에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고흥군, 보성군 등 가장 많은 6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어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과 지역정착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 지원정책과 다문화 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외국인 지원정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 정책참여, 비자 개선 등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중심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비자 사업을 추진함
 - 다문화 지원정책은 다문화 가족지원,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 등을 중심으로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으로 구성됨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전라남도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중소제조업 및 농·어업 분야에서 인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반면, 전라남도의 등록외국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근로자 중 전문인력이 아닌 비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남도는 증가하는 외국인을 활용한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2024년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및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추진 등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다문화가정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됨
 - 반면,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에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을 강조하면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유입 정책과 함께,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특히, 전라남도의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비전문인력이 아닌 우수인력인 특정활동(E-7) 및 숙련기능인력(E-7-4) 유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전라남도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III 외국인 우수인력 수요 및 정착 정책 검토

1. 외국인 우수인력 수요 검토

1) 전라남도 빈일자리 검토

□ 전국 빈일자리 현황¹⁵⁾

-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정책을 활용함
 - 특히, 우수인력 유치와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적 조치와 함께 전라남도의 특성 및 산업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산업별 인력수요를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우수인력 유입 정책설계가 필요함
- 전국 일자리 종사자는 19,808,166명이며, 빈일자리는 197,767명 및 빈일자리율은 1.1%로 나타남
 - 전라남도 일자리 종사자는 663,881명이며, 빈일자리는 6,903명 및 빈일자리율은 1.1%로 나타나 빈일자리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함
 - 17개 광역시·도 중 빈일자리 및 빈일자리율 규모는 9위 수준으로 나타남

표 10 광역시·도별 빈일자리 현황

(단위 : 명, %)

지역	종사자	빈일자리	빈일자리율	지역	종사자	빈일자리	빈일자리율
전체	19,808,166	197,767	1.1	경기	4,883,096	59,333	1.3
서울	4,841,198	34,576	0.7	강원	516,662	5,295	1.1
부산	1,200,459	9,612	0.9	충북	642,355	10,213	1.7

15) 빈일자리 현황은 2024년 1월 기준

지역	종사자	빈일자리	빈일자리율	지역	종사자	빈일자리	빈일자리율
대구	754,790	6,638	0.9	충남	868,765	8,900	1.1
인천	969,272	12,034	1.3	전북	583,587	6,592	1.2
광주	538,797	5,297	1.1	전남	663,881	6,903	1.1
대전	544,157	3,821	0.7	경북	889,452	10,899	1.3
울산	429,744	3,741	0.9	경남	1,120,429	10,747	1.0
세종	135,181	1,031	0.8	제주	226,340	2,136	1.0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시도)/산업별(대분류) 고용

- 전라남도 전체 빈일자리 6,903명 중 제조업이 1,661명(빈일자리율 1.5%)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1,339명, 빈일자리율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42명 빈일자리율 0.9%)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은 빈일자리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종사자 수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타 산업보다 적으나 빈 일자리는 제조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0%), 운수 및 창고업 역시 숙박 및 음식점업과 유사하게 전체 종사자 수 대비 빈일자리율(3.0%)이 높게 나타남

- 반면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서는 산업 종사자 수도 많으나 빈일자리율이 1.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종사자가 제조업 다음으로 많은 93,748명이지만 빈일자리는 842명(빈일자리율 0.9%)으로 나타남

표 11 전라남도 빈일자리 현황

(단위 : 명, %)

산업분류	종사자 전체	종사자(상용+임시일용)	빈일자리	빈일자리율
전체	663,881	614,458	6,903	1.1
B. 광업(05-08)	721	693	12	1.7
C. 제조업(10-34)	114,000	112,525	1,661	1.5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7,124	7,108	8	0.1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7,949	7,921	59	0.7

산업분류	종사자 전체	종사자(상용+임시일용)	빈일자리	빈일자리율
F. 건설업(41~42)	92,683	89,524	308	0.3
G. 도매 및 소매업(45~47)	60,810	46,410	575	1.2
H. 운수 및 창고업(49~52)	28,707	23,251	719	3.0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2,613	32,240	1,339	4.0
J. 정보통신업(58~63)	8,167	7,684	85	1.1
K. 금융 및 보험업(64~66)	26,493	12,995	65	0.5
L. 부동산업(68)	10,096	10,000	49	0.5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21,656	21,615	132	0.6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29,114	25,656	201	0.8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50,684	50,684	211	0.4
P. 교육 서비스업(85)	48,521	47,064	193	0.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93,748	93,678	842	0.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2,815	9,248	247	2.6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17,978	16,161	199	1.2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시도)/산업별(대분류) 고용

- 2024년 1월 기준, 전라남도 산업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및 빈일자리율을 살펴 보면 전체 1,661명 중 빈일자리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빈일자리는 557명이며 빈일자리율은 5.1%로 나타남
 - 빈일자리 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다음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84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196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150명) 순으로 나타남
 - 빈일자리율은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23.1%)이 가장 높았으나, 빈일자리 수가 3명으로 낮았으며, 다음으로 가구 제조업(13.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순임

표 12 전라남도 제조업 빈일자리 현황

(단위 : 명, %)

산업	빈일자리	빈일자리율	산업	빈일자리	빈일자리율
소계	1,66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7	0.9%
식품품 제조업	80	0.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70	1.0%
음료 제조업	0	0.0%	1차 금속 제조업	52	0.4%
담배 제조업	-	0.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50	1.5%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3	1.9%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	0.2%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0.6%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2	2.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23.1% ¹⁶⁾	전기장비 제조업	79	1.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	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4	7.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	0.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	2.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77	3.1%
코르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	0.0%	가구 제조업	50	13.2%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96	1.0%	기타 제품 제조업	0	0.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6	0.6%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	0.1%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시도)/산업별(제조업-중분류) 고용

2) 전라남도 인력수요 검토

□ 전라남도 시·군별 인력수요 검토

- 전라남도 시·군별 빈일자리는 코로나19의 영향 기간을 포함하여 2018년부터 2023년 까지 증가하였으나 팬데믹 종료 이후에는 2018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 목포, 순천, 광양, 구례, 고흥, 강진, 영암, 영광 지역은 2018년 대비 2023년 빈일자리가 개선된 지역이며, 나주, 담양, 장흥, 해남, 무안, 함평 지역은 2018년 대비 2023년 빈일자리가 악화된 지역임

1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종사자 수가 13명으로 유일하게 두 자리 수 인력이며, 이로 인해 높은 빈일자리율이 도출됨

-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는 2018년 수준으로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시·군별 편차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력 수요는 차별화가 필요함
- 다만, 2023년까지는 빈일자리 수가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다시 빈일자리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실제 통계에서 빈일자리가 개선되었던 목포, 여수, 영암 지역은 2024년부터 빈일자리수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전라남도 시·군별 빈일자리 검토

(단위 : 명)

구분	실제										추정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상반기	하반기																
목포시	411	312	498	501	290	285	310	501	410	457	427	320	386	386	386	385	385	385
여수시	385	348	493	569	370	417	471	383	446	504	386	394	421	421	421	421	421	421
순천시	334	274	432	406	236	330	264	307	414	286	208	292	288	285	283	281	278	276
나주시	246	372	230	238	193	359	283	512	1,539	561	556	345	589	601	614	626	639	651
광양시	342	343	242	436	124	107	196	322	309	266	337	260	261	260	259	259	258	257
담양군	111	190	154	137	79	115	109	199	307	272	293	212	270	281	293	305	316	328
곡성군	72	81	66	75	40	108	154	85	131	101	81	70	95	96	97	97	98	99
구례군	75	71	38	63	25	47	19	59	59	42	55	42	45	44	44	43	43	42
고흥군	100	53	41	107	16	28	93	63	45	21	25	49	40	38	37	36	34	33
보성군	15	17	25	25	42	44	22	25	14	8	11	11	8	7	5	3	3	3
화순군	156	254	179	154	188	148	152	229	278	211	223	145	201	201	202	203	204	205
장흥군	17	17	163	96	24	116	54	92	74	59	15	48	57	56	56	55	55	54
강진군	77	76	10	149	102	84	57	73	106	47	40	33	51	49	47	45	42	40
해남군	142	44	221	255	95	74	95	121	144	145	111	173	134	134	133	133	133	133
영암군	563	378	458	373	145	205	217	249	352	386	600	432	514	545	576	608	639	670
무안군	93	136	68	47	44	101	73	136	175	186	102	144	150	155	161	166	171	176
함평군	57	58	54	102	70	92	85	139	196	164	127	148	158	164	169	175	181	187
영광군	296	175	154	134	181	174	151	204	278	204	142	148	174	173	171	170	169	168
장성군	233	105	125	91	93	144	151	237	290	275	234	183	138	93	47	2	2	2
완도군	91	73	36	63	34	83	34	38	43	28	44	51	40	39	38	37	36	34
진도군	8	1	0	5	8	16	3	8	20	3	19	28	23	25	27	29	31	33
신안군	30	22	43	8	6	41	10	21	7	18	34	9	17	16	16	15	15	15
합계	3,854	3,400	3,730	4,034	2,405	3,118	3,003	4,003	5,637	4,244	4,070	3,537	4,060	4,069	4,082	4,094	4,153	4,212

주 : 빈일자리 추정은 Brown 지수평활법을 활용하여 추정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시도)/산업별(제조업-중분류) 고용

- 빈일자리 통계 외에도 보건분야 종사자, 계절근로자 및 건설업 일용직을 고려하면 전라남도 내의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맞춰 외국인 인력 유입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업의 경우, 2023년 전국 건설근로자 수요¹⁷⁾는 약 155만 명이며 공급은 약 157만 명으로 근로자 수요에 대해 초과공급됨
 - 전라남도의 근로자 수요는 약 6.6만 명이었으나, 내·외국인을 합한 근로자 공급은 약 6.2만 명으로 4,000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함
 - 농업분야 계절근로자¹⁸⁾는 '23년 3,482명을 고용했으나, '24년 상반기 배정인원 5,818명에 대해 약 99.5%인 5,496명에 이미 배정되어 계절근로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라남도 산업별 인력수요 검토

- 전라남도 전체 제조업 및 세부 제조업에 대한 인력수요 검토 결과 제조업 전반적으로 빈일자리 수는 2025년까지 2021~2023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라남도 제조업 중, 2024년 1월 기준 가장 빈일자리수가 가장 높은 기타 운송장비, 기타 기계장비 및 장비제조,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2024년 1월보다 빈일자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장 높은 비중과 세부 업종 간 전문성을 비교 고려할 때, 해당 산업의 인력수요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됨

1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2).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

18) 자료 : 전라남도 보도자료(2024),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시군 전국 최다"

표 14 전라남도 제조업 및 세부 산업별 인력수요

(단위 : 명)

구분	제조업(전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21.1/4	1,241	152	42	59
2021.2/4	2,001	359	108	112
2021.3/4	2,195	417	182	30
2021.4/4	2,186	350	174	122
2022.1/4	2,105	233	208	106
2022.2/4	2,023	284	154	69
실제 2022.3/4	2,188	421	192	115
2022.4/4	2,257	431	156	119
2023.1/4	1,379	251	210	106
2023.2/4	1,416	258	64	117
2023.3/4	1,478	451	99	122
2023.4/4	1,644	384	247	181
2024.1/4	1,648	473	268	222
2024.2/4	1604	420	222	210
2024.3/4	1581	429	230	225
2024.4/4	1558	439	238	240
추정 2025.1/4	1535	448	246	255
2025.2/4	1513	457	255	270
2025.3/4	1490	466	263	286
2025.4/4	1467	475	271	301

주 : 빈일자리 추정은 Brown 지수평활법을 활용하여 추정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시도)/산업별(제조업-중분류) 고용

□ 전라남도 성장산업 인력수요 검토

- 전라남도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활력이 저조해지는 문제에 대해 이를 극복하고자 관광, 신산업, 친환경에너지, 조선 등 여러 성장산업을 구축하고 있음
- 전라남도 지방시대를 준비하며 ‘첨단 미래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중심지 도약을 통한 남해안 광역개발 선도’를 명시하며 성장산업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추구함

- 향후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과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을 전략으로 설정하였음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은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지역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이 있음
 - 해당 전략의 세부 과제들은 전라남도의 산업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표들이지만 산업 인력에 보다 집중된 과제는 기회발전특구,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으로 판단됨
 -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회발전특구의 산업 인력 수요는 성과에 연동되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지역 특화형 산업은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이차전지 소재사업 생태계 등을 구축하며 해당 분야와 연계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은 산업 분야 및 과학기술 분야의 지역정책과제를 수행 하며,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수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첨단 의료 복합단지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산업 성장을 유도할 예정임

표 15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전략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신뢰를 지키는 주도적 특화발전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 동력 확충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지역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 주요 성장산업 인력 수요 검토¹⁹⁾

- 2024년 전남 서남부 지역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업황 개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은 전년동기대비 26.6% 증가함

19) 자료 : 한국은행(2024). 1/4분기 전남 서남부 지역 경제동향

- 매출 증가에 따른 업황 개선은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지역경제 모니터링 결과 3년치 이상의 조선 수주잔량이 누적되어 있으며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 등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조선업 성장이 지역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았음
 - 하지만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향후 조선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인력 수급 문제를 지적함
 - 따라서, 여전히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인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점이 조선업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함
- 인력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23년 10월 지역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숙박음식업, 조선업, 농수산업이 대상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설계한 취업 장려 및 장기근속·복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선업의 성장에 맞춰 인력 수요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23년 4월 전라남도는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으면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적인 조선업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어선용 HDPE 소재 및 판재를 개발하여 4.99톤, 7.93톤, 9.77톤 3종에 대해 설계, 구조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는 실증사업임
 - 전남테크노파크는 향후 추가적인 선박용 연료 실증 사업 등에 대한 추가 특구지정을 추진 중이며 광범위한 조선분야 인력 수요가 존재함
- 지역 중점 추진 산업을 외에도 교육개혁을 통해서도 인력 수요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남도 내 대학교를 활용하여 향후 첨단 분야(그린 스마트팜,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와 연계를 통해 인력 수요 및 정주 여건 개선 기반을 마련할 계획 추진 중임
- 동시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모델 구축 및 4차 산업 변화에 따른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양성 구축을 추진함
 - 산합력력 기반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또한, 지역혁신 거점으로서의 변화 및 미래인재 양성 모델 브랜드를 구축함

- 지역특화 창의인재 육성을 통해 지방대학혁신, 융복합 교육연구기능 강화 등을 달성하고 전남이 키워 전남을 키우는 청년 신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여 지역 대학 혁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라남도는 추진할 계획임
 - 해당 인프라를 기반으로 향후 전남이 키워 전남을 키우는 신청년 인재, 외국인 우수 인력 등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 전라남도는 다양한 산업 추진과 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및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의 호황과 맞물려 일자리와 그에 맞는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농어촌 지역의 인력 수요 검토²⁰⁾

- 농어촌 지역은 파종 및 수확기 등 특정시기에 인력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시기에 일손이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계절근로제를 실시 해왔음
- 전라남도 농업 고용기간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계절근로제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전체적으로 종사자 현황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농촌에서 계절근로자와 같은 단기근로자의 수요를 의미하기도 함
 - 1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 종사자는 2016년 대비 2022년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도 과거 수치 대비 높은 종사자 현황을 보임
 - 3~6개월과 6개월 기간의 종사자는 과거 2016년 대비 지속적으로 고용자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표 16 전라남도 농업 고용기간별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개월 미만	37,904	39,268	36,679	35,857	17,931	47,146	47,217	38,050
1~3개월	5,355	4,783	6,535	5,482	3,015	6,518	5,793	5,471
3~6개월	520	572	663	986	1,083	932	844	732
6개월	699	679	803	641	1,312	1,316	1,205	1,355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농림어업조사

2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농림어업조사

- 이를 종합할 때, 전라남도 농업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와 같은 단기종사자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노령화로 젊은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외국인 인력이 필요함
- 전라남도의 농업분야는 2021년 계절근로자 79명에서 23년 3,48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역농촌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고용기간별 종사자 현황을 고려할 때, 계절근로자와 같은 단기근로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2. 외국인 우수인력 정착 정책 검토

□ 외국인 우수인력 정착 어려움

- 대한민국으로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유치에 필요한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프로그램 신설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최근 외국인 정책이 노동력 충원 방식의 ‘노동자 유입’ 중심에서 최근 ‘외국인 인력과 가족’ 중심의 가구로 변화된 것은 위 내용처럼 지속적인 정주 외국인을 증가시키기 위함
 - 비자 개선, 국내 유학 프로그램 등은 인력 확보를 위한 양적 과정 및 지표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국내 입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인력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질적 과정 및 지표로 볼 수 있음
- 2023년 이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통해서도 따르면 외국인(전체) 51%는 가족·친인척 등과 함께 거주하며 20.2%는 직장 등 기타 동거인이며, 28.8%만이 혼자 거주하는 형태로 구성됨(통계청, 2023b)
 - 방문취업의 경우, 가족·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62.9%로 취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가족과의 정주여건 제공은 효과적인 정책 방향성임

표 17 외국인 체류자격별 동거인 현황

(단위 : %)

	가족 친인척 등	직장 동료 및 기타 동거인	혼자 살고 있음
외국인	51.0	20.2	28.8
비전문취업	2.3	63.5	34.2
방문취업	62.9	4.9	32.1
전문인력	22.4	22.8	54.7
유학생	8.6	29.5	61.9
재외동포	75.8	2.3	21.9
영주	83.1	1.8	15.1
결혼이민	95.9	0.8*	3.2
기타	61.7	17.5	20.7

자료 : 통계청(2023b)

- 실제로 외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가족과 관련된 상황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에 살면서 어려움 점’을 1순위로 언어문제를 선택하였지만, 이어지는 2순위로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선택하여 가족 관련 인식이 높음을 나타냄
 - 체류 유형을 기준으로 한 설문에서 1순위는 외로움으로 정착에 있어 가족 관련 사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여성에게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는 1순위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체류 유형을 기준으로 한 설문에서도 자녀 양육 및 교육은 3순위로 높은 순위였음

표 18 한국에 살면서 어려운 점

	응답자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성별	전체	415	언어 문제	자녀 양육 및 교육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남	160	언어 문제	은행, 공공기관 이용	가족 간의 갈등	생활방식 및 문화차이
	여	255	자녀 양육 및 교육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은행, 공공기관 이용
체류 유형	전체	430	외로움	언어 문제	자녀 양육 및 교육	경제적 어려움
	국적 취득	62	외로움	자녀 양육 및 교육	가족 간의 갈등	외국인에 대한 무시 및 차별
	취업	148	외로움	언어 문제	노동환경	자녀 양육 및 교육
	거주	220	언어 문제	자녀 양육 및 교육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자료 : 박현욱·주희진(2022)

□ 외국인 우수인력의 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

- 이처럼 외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또는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에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제한적인 정책으로 효과가 미미한 상태임
 - 2019년,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내 거주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배제를 차별로 규정하며 이를 개선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외국인 가정의 보육 부담 문제 개선을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신설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향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등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 조례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렇다 보니 보육료 지원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음
 - 조례 신설을 통한 보육료 지원 외에도 다른 형태로 외국인 정주 여건 또는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해당 현황은 향후 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주는 현황이라고 판단됨

표 19 지방자치단체별 보육료 지원 및 조례 마련 현황

(단위 : 개, %)

지자체 구분		보육료 지원	조례	지자체 구분		보육료 지원	조례
광역시	기초			광역시	기초		
합계	228	62(27%)	86(38%)	충청북도	11	1	1
경기도	31	31(100%)	31(100%)	전라남도	22	1	1
인천광역시	10	10(100%)	10(100%)	대구광역시	9	1	1
광주광역시	5	5(100%)	5(100%)	강원도	18	0	2
경상남도	18	18(100%)	18(100%)	세종특별자치시	1	0	1
서울특별시	25	5	7	부산광역시	16	0	0
충청남도	15	5	6	대전광역시	5	0	0
경상북도	22	2	1	울산광역시	5	0	0
전라북도	14	1	2	제주도	1	0	0

- 외국인 우수인력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사례로 자녀 양육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외국인 우수인력 정착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요소가 상당수 존재함

- 제도 보완이 없다면, 보육료 부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는 복합적으로 외국인 우수인력의 정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외국인 우수인력의 상당수는 한국 사회에 적응 및 향후 지역사회 내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다소 수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필요한 외국인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정책적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 병행을 통해 명확한 정책 접근 방향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언어 문제, 보육 문제 등의 우선순위가 도출됨(박현욱, 주희진, 2022)

3. 소결

□ 전라남도 인력수요 검토

- 전라남도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신산업 및 교육연계 분야 발굴 및 추진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제조업, 농업 등) 수요도 존재하고 있음
 - 기회발전특구, 혁신성장거점 육성,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등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통계청 자료를 통해 제조업의 빈일자리는 증가하며 농업 분야에서 단기 일자리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전라남도 내 기존 산업의 회복세와 정책 추진이 맞물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지역 내 근로자가 부족한 상태이며 따라서, 외국인 우수 인력 수급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해당 산업 필요성에 맞춰 전라남도에 최적화된 외국인 우수 인력 수급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이에 가장 적합한 비자 제도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전라남도는 현재 지역특화비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되 지속적으로 산업전망과 외국인 인력 수요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동시에 국내·외 비자 사례검토를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우수인력 정착 정책을 위한 사회조사 필요

- 외국인 우수인력의 유입 및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맞춤형 정책설계가 필요함
 - 인력 유치부터가 지역사회에서 부족한 산업군 및 해당 일자리를 파악하고 적정 수준 공급을 위해 다각도로 설계하는 것처럼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노동 또는 정주 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인천광역시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를 통해 성별 및 체류 유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필요도,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였음
- 인천광역시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자료는 장기적으로 인천광역시의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및 정주 지원에 대해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단기적으로도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사용됨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 우수인력 이민정책을 시도 중이지만, 단일민족이 강조되는, 역사적 배경으로 우리나라는 외부 변화에 민감함
 -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인력 변화가 사회적 갈등 없이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가 중요하지만, 광역 단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력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기초 단위의 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가 어렵다면 광역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외에도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전라남도의 경우, 광양시는 포항시와 동일한 산업 배경을 가지고 외국인 우수인력 정착에 대한 벤치마킹 및 정책 협력이 원활할 수 있음
 - 외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정책오차를 줄임과 동시에 지역 간 벤치마킹을 통해 발전된 우수인력 정주 여건 확보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IV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및 정착 사례

1. 국내 사례²¹⁾

1) 경상북도

□ 우수인력 유치 정책²²⁾

- 경북은 2024년 4월 2일 이민자의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반영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K-드림 외국인 책임제)을 수립함
- 기본계획은 3대 전략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시스템 구축’,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수급 전략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을 중심으로 전개함
-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 계획 중인 ‘K-드림 외국인 책임제 핵심사업은 유입, 유학, 취·창업, 정착, 개방 등의 5개 분야이며, 직접적인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방안은 유입 및 유학으로 볼 수 있음
 - 유입 : 광역비자(R비자) 제도 마련, 지역인재 유치 트랙 확대, 경북 인재 유치센터
 - 유학 : K-드림 협업체계 구축, 취업지원 교육패키지 2.0 시범 시행,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제정
 - 취·창업 : 농업 인력뱅크 운영, K-드림 워크넷 시스템·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 구축
 - 정착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외국인 행복드림타운 조성,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지원
 - 개방 : 이민자 역량강화, 도민 인식개선, 이민-개발 ODA 대전환, 이민청 유치

21) 지역정착 정책 자료는 제3차 202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작성

22) 자료 : 경상북도 보도자료(2024). 도,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 발표

- 유입 항목은 직접적으로 해외 우수인력을 국내로 유치하는 제도로 현지 프로그램부터 국내 유입까지를 다루고 있음
 - 경북 인재 유지센터 사업은 해외 현지에 해당 센터를 설치하고 우수인력에 대해 입국 전부터 한국어 및 취업 맞춤형 기술교육을 향후 실시할 계획임
 - 기존 비자 체계 외에 지역특화 비자인 R비자 신설추진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을 추진함
 - 경북형 초청장학생의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경북 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우수 산업의 부족 인력을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해당 사업은 외국인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며, 석사와 박사 과정에 대한 학비와 체류비를 지원함
- 유학 항목은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 우수인력이 산업별 인력 수요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취업연계를 위한 워크넷 시스템 구축, 취업지원 패키지 등을 활용함

□ 우수인력 지역정책 정책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행계획을 세우고, 해당 과제는 공통 과제와 자체과제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색 또는 현안에 적합한 사업을 설계함
 - 지역정책 정책은 통합과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됨
- (통합) 통합 분야 자체 과제로 경상북도는 이민단계별 정착 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 배경 자녀 역량 강화,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설정하였음
-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은 언어 문제 등으로 혼선을 겪는 외국인 인력 가족 등에게 언어 중심 또는 기타 프로그램을 통한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구성됨
 - 외국인 한국어 교실(포항시): 영어권 외국인 대상의 한글 수업 개설을 통한 국내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금 및 자녀양육수당 지원(청송군): 정착지원금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생활보조비 일부와 자녀 양육수당 일부를 지원

-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됨
 - 다문화가족 학습지원(고령군)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능력강화를 위해 방문학습지 전문 업체와 연결을 통해 학습지원 및 사교육비 경감
 - 고려인주민자녀 맞춤형 돌봄지원(경상북도) : 고려인 주민 자녀(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려인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
-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는 외국인 인력이 취약한 복지 분야인 의료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 위주로 구성됨
 -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포항시) : 출산용품지원을 통해 육아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가정생활을 지원
 - 결혼이민여성 출산도우미 지원(안동시) : 타국에서 출산하는 외국인의 심리적 부담 완화
- 이민자의 지역사회참여 확대는 다문화 가족 모국에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민간 외교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ODA와 외국인 이민과 연계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인권) 인권 분야는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를 설정하였음
-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경상북도) 등을 통해 외국인 신분으로 인해 취약해질 수 있는 인권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는 외국인의 문화적 인프라 형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정착을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외국인 근로자센터 보조금 지원(경산시) : 고국이 그리운 외국인 인력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한국문화적응을 지원하는 센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적응을 유도
- (협력) 협력 분야는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강화를 설정하여 '결혼이주여성 친정집 고쳐주기'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으로 ODA와 연계함

2) 강원특별자치도

□ 우수인력 유치 정책²³⁾

- 강원은 특별자치도로 변화가 생기면서 특별법을 중심으로 외국인 우수인력에 대한 유치 전략을 집중하고 있음
 - 특별법 이전에는 도내 기관(예시. 강원도립대학교 국제교류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여러 국가의 자치단체 내 교육기관, 기술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수급 및 인프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함
- 특별법 이후에는 특별법 내 조항 신설을 통해 외국인 우수 인력 수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나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법 개정안을 준비함
 - 해당 개정안에는 강원 지역 내 이공계 학위 취득자에게 영주·국적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도내 체류 외국인에게 사증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담고 있음

□ 우수인력 지역정착 정책

-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경상북도와 유사하게 외국인 우수인력 지역정착 정책은 통합과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됨
- (통합) 통합 분야 자체 과제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를 설정함
-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은 국내 및 상황 체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업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정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됨
 - 결혼이민여성 직업훈련 및 자립기반 강화(강릉시, 속초시, 영월군, 평창군, 동해시, 원주시, 횡성군, 인제군, 홍천군, 춘천시, 태백시) :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간호조무사 등 분야에 대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취업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양양군,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적령기를 놓친 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 비용을 지원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23) 자료 : 강원특별자치도(2024). 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됨
 - 다문화가족 엄마(아빠)나라 말 배우기(홍천군, 인제군) :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 감수성 향상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다문화가족 내 자녀의 심리적·학업적 성장을 지원
 - 찾아가는 언어평가, 사후교육(홍천군) : 언어발달 교육이 종료된 아동이 지속적으로 언어 촉진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발달과 면단위 지역의 아동의 언어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 (인권)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를 설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문화예술사업,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운영을 통해 문화적 정서 함양을 통해 가정 내 안정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짐
- (협력) 협력 분야는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강화를 설정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정착 및 협력 효과를 높이고자 함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운영(강원도, 여성가족부) :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 효율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이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등의 안전심의
 - 좋은 이웃과 함께하는 정착지원사업(홍천군) : 정착 다문화 가정이 다문화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분위기 조성

3) 전북특별자치도

□ 우수인력 유치 정책²⁴⁾

- 전북은 2024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변화가 생기면서 특별법을 중심으로 외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유치 전략을 집중하고 있음
- 특별법 이전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를 중심으로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

24)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4).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인구조소 전지역 추진"

- 해당 시범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는 78.8%가 만족했으며, 근무지, 업무, 급여, 복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음. 기업의 경우도, 85.2%가 만족하였으며 동시에 재참여 의사는 95%를 보였음
- 특별법을 통한 자치도 전환 이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외국인 우수인력에 유입에 대응하고 있음
- 특별법 제63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전북 특별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 등에 대해서 법무부와 다른 체류 기간을 부여함
- 또한, 특별법 제6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 통해 외국인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있음. 고용특구 지정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맞춤형 인력을 수급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원 기관 설치를 통해 구직자들과 입주 기업의 매칭을 실시함
 - 근거조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사례를 종합하면, 광역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 외국인 우수 인력 수급에 대응하고 있음
 -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특별법 내 조항 신설을 통해 외국인 우수 인력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며 특별자치도가 아닌 지역은 기본계획 중심의 사업 추진을 통해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응하고 있음

□ 우수인력 지역정책 정책

- 외국인 우수인력 지역정책 정책을 통합과 인권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통합) 통합 분야 자체 과제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설정하였음

-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은 학습 및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 내 정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 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순창군)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임과 동시에 가정 내 공부방 환경 개선을 통해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
 - 전라북도 외국인 현장상담소 운영(전주시, 익산시) : 도내 외국인 주민이 일상 생활 적응과정에서 언어소통과 정보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 유도하며 법률·행정·노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원
-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는 다문화 가정 부모와 외국인 자녀 간 유대감 확대 및 외국인 자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됨
 -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전라북도) :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학교이탈 자녀 등에 대한 언어교육, 진로지도, 심리·정서 상담 등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발달 도모하며 진로적성검사, 탐색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
 - 아버지학교 운영(진안군) : 다문화가족 아버지 교육을 통해 가족의 행복리더로서 가족 간 관계회복 및 친밀감 증진을 도모하며 가정 내 분위기 향상을 통해 심리적 정주 환경 지속적인 개선
- 이민자의 지역사회참여 확대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 내 구성원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에 집중함
 -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전라북도) : 도, 경찰, 교육청, 유관 기관 등의 인력이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심의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하는 것에 기여
 - 다문화정보공유 프로그램 제작지원(전라북도) : 언어 차이로 인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다문화 언어로 제작하고 이를 송출하여 알권리 충족과 정주 및 심리적 안전감을 향상
- (인권)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등을 설정하였음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민들 또한 다문화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둠
 -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전라북도) : 외국인 주민과 도민이 함께 다문화 예술·문화·체육프로그램을 상호 소통하며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에 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정 한국문화 체험(전주시, 진안군, 무주군) : 여가·문화 활동을 통해 이주여성 및 자녀들에게 문화적 가치관 형성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문화 참여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 확대 도모
-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은 재외동포 및 국제교류자문관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국제 교류자문관과 해외향우회를 활용하여 새만금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개발 활성화와 외국인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함

2. 해외 사례²⁵⁾

1) 싱가포르

□ 우수인력 유치 정책

- 싱가포르 외국인 인력 유치는 능력에 따른 이원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 이주 노동과 관련된 싱가포르 비자는 숙련 및 반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고급인력에 대한 전문가 비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 비자는 숙련노동자와 반숙련 노동자들 간의 차이가 있으며 전자는 전문 학위와 업무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비자로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갱신할 경우, 3년을 연장할 수 있음
 - 반숙련 노동자들은 건설, 제조업, 선박 등의 분야의 노동자에 대해 지급되는 비자이며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임

25)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3). 외국인 핵심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 전문가 비자는 싱가포르 내 회사의 고용 제안을 받은 관리자, 임원 및 전문직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최대 2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갱신 시 3년 더 연장할 수 있음
- 유학생들의 경우, 싱가포르 내 교육기관의 전일제 학생에게 학생비자가 발급되며 학기 중에는 매주 최대 16시간씩 일을 할 수 있음
 - 이들은 훈련 고용 비자, 훈련 노동 비자, 워킹 홀리데이비자 등을 통해서도 싱가포르 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최소 1개 이상의 국가시험을 통과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싱가포르 영주권은 외국인 고급인력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학생비자는 가능하지만, 만속련 노동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제한됨

□ 우수인력 지역정착 정책

- 외국인 우수인력의 지역정착에 대해서도 싱가포르는 이원화된 정책이 드러나며 이는 발급된 비자 종류에 따라 가족의 동반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 영주권자, 취업비자 등의 소지자는 동반가족비자, 장기방문비자, 단기방문비자 등 일부 차이는 있으나 가족 동반 허용이 가능함
 - 동반가족비자는 싱가포르 내 정식 회사에 고용된 취업비자 등에게 적용되는 비자임
 - 장기방문비자는 동반가족비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취업비자 소지자의 고용주가 보증인이 되어야 가능한 비자임
 - 단기방문비자는 신청자격이 존재하는 자의 배우자, 형제 등의 가족들에게 최장 89일 까지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근로는 할 수 없는 비자임
- 학생비자 소비자들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보증을 통해 가족 초청을 할 수 있으며, 가족은 장기방문비자에 적용을 받음
-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비자에 따른 가족동반 기간, 유무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이민, 경제적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효과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일본

□ 우수인력 유치 정책

- 일본의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는 노동력 부족해결책으로 도입되었으며 외국인 연수와 기능실습제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음
-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는 기능실습 자격으로 입국하여 평가와 시험을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음
 - 기능실습생은 5년까지 체류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건설분야의 경우, 5년 이후 최대 2년까지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음
-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참여 산업분야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이후 요양직종도 추가되었음
 - 기존 농업, 제조업 등의 일반산업분야를 외에도 일본 또한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상태로 인해 2017년 요양직종도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로 포함되었음
- 2018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건설, 농업, 간병, 조선, 숙박 등 5개 업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취업자격 신설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기술실습제도와 별도로 단순기능직 취업을 폭넓게 허용한 새로운 체류자격임
- 특정기능제도는 1호와 2호로 구분되며 전문성과 직종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며 최장 5년까지 일본에 체류가 가능하되 1년, 6개월, 4개월 등으로 갱신이 가능한 형태임
 - 1호는 특정 분야의 상당 수준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함
 - 2호는 건설업과 조선업에만 취업이 가능하며, 업종변경은 불가능한 체류자격임

□ 우수인력 지역정책 정책

- 일본 내 외국인 인력에 대한 지원은 입관법 개정을 통해 여러 지원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다문화공생’을 외국인 사회에서 요구하였고 이것이 정책방향성으로 채택됨
- 외국인 인력은 등록지원기관을 통해 손쉽게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 내 행정 접근성을 높임

- 고용센터에 해당하는 헬로워크에는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가 존재하여 취업, 이직 등 일자리에 대한 상담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음
- 취업연결 외에도 ‘정주외국인 취업지원 코스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언어, 노동법, 사업체 견학 등 단순 상담 외에도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행정적으로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입국관리국을 폐지하고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하였음
 - 체류관리지원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연계하여 외국인 체류관리 및 체류 지원 사업을 수행함

3) 스웨덴

□ 우수인력 유치 정책

- 스웨덴의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정책은 고용주의 수요 기반에 입각해서 추진되었음
 - 단순기술을 포함한 여러 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를 고용주가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음
-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자는 2년의 취업 허가가 부여되었으며, 연장은 가능하지만, 총 고용 허가기간은 4년보다 짧아야 하는 것으로 적용받음
 - 이들은 스웨덴에서 4년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취업이민자는 실직할 경우, 3개월 이내 재취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엄격한 조건이 전제되어 있음
- 유학생들은 노동 허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30학점의 이수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1학기 수업을 완료한 경우에만 노동 허가를 부여하였음
- 특이점으로는 계절적 노동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비 EU 출신 국가 외국인노동자에게 해당되며, 농장 소유주나 근로자를 위한 임금 및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임

□ 우수인력 지역정책 정책

- 스웨덴은 이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스웨덴 국민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외국인들에게 스웨덴 정착을 위한 사회적·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장치로 작용함
-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자의 역량 강화하고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이러한 요소는 가족이 존재하는 이민자에게 강력한 심리적·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스웨덴 이민정책은 가족 동반 중심의 정책으로 발전하였음
 -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수입과 재산을 이민 당국에 증명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살기에 적합한 주택에 대한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함.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 체류 허가가 결정되며, 향후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소득과 주거 요건을 재확인 하지 않음
 - 노동자는 체류자격을 획득한 경우,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가족은 가족을 초청한 노동자와 동일한 체류기간이 부여됨. 특히,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업 활동도 가능함
 - 유학생은 고등교육을 위한 체류 허가인 경우, 가족을 초청 할 수 있으며 박사 과정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가족도 함께 적용이 가능함
 - 특이점으로는 비EU국가인 경우, 학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SI(Swedish Institute)장학금²⁶⁾을 통해 학업을 마칠 수가 있어 외국인 유학생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함

4) 핀란드

□ 우수인력 유치 정책

- 핀란드 우수인력 유치 정책의 핵심은 이원화된 정책체계이며 가족 재결합 조건 등의 조건을 통해 저숙련 노동자 이민을 억제하고 고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주 절차는 간소화하는 접근법임

26)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

- 거주 허가 측면에서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모두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함
 - 거주허가는 A유형(연속형, 최대 4년)과 B유형(고정형, 최대 1년)으로 나뉘며, A유형을 허가 받은 4년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학생의 적극 유치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거주 요건이 완화되었음
 - 과거에는 매년 거주 허가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학업 기간 중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변경
 - 학업 이후, 취업을 위한 거주 허가 역시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으며 고등교육 기관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은 단기 거주 허가에서 지속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 창업이나 고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입국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 트랙을 실시하고 있음
- 난민은 개인정보, 지문, 서명 등의 개인정보 제출과 이민심사 인터뷰 등의 복합적인 절차를 통해 통과된 자에 한하여 핀란드에 거주할 자격을 부여하며, 통화하지 못할 경우, 즉시 추방하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우수인력 지역정착 정책

- 이민심사 인터뷰 통과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 엄격한 제도적 시행을 하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거주 자격이 부여된 이민자는 이주 동기, 인증, 출신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민 코디네이터를 1명 고용할 수 있으며, 이민 관련 부서 또는 인접 지자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특이점으로는 이민자들에게 이주민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Talent Hub)을 운영하며 유학생이 고숙련 노동자로서 향후 이민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Talent Boost)을 운영함
- 또한, 개별 이민자에 대해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자가 거주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시행되어야 함
 - 해당 프로그램에는 언어 및 기술 학습, 실업 수당 등 사회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국내·외 사례 종합

1) 국내 사례

□ 우수인력 유치 정책

-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외국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특별자치도 유무와 상관없이 체류기간, 기간 연장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비슷함
- 경상북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 비자사업 참여와 동시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광역비자를 병행 추진하여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를 추진 중임
 - 경상북도는 광역비자 신설·제안을 한 상태로 체류기간, 기간 연장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방향성을 설정하였음
 - 광역비자는 현재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된 상태임
-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중심으로 외국인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전략에 집중함
 - 특별법에 도내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해 시증발급절차, 체류 자격 변경, 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 중에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중심으로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를 추진중이나 타 자치도와는 차별점을 두고 있음
 - 전북은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 사업에 참여함과 동시에 특별법에 기반한 특정 지구·단지²⁷⁾ 등에 대해 법무부와 다른 체류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를 추진함

□ 우수인력 지역정책 정책

- 외국인 우수인력 지역정책 정책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상황에 맞춰 세부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함

27) 복합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산악관광진흥지구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대분류인 개방,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주제 중, 지역정착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범주는 통합과 인권임
 - 통합은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담고 있음
 - 인권은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난민 정책 추진임
- 경상북도의 우수인력 지역정착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통합에서 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이민자 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실시하며,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금,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 결혼이민자 모국 봉사활동 등이 있음
 - 인권에서는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를 실시하며, 사업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센터 보조금 지원 등이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인력 지역정착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통합에서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를 실시하며,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고려인주민자녀 맞춤형 돌봄지원 등이 있음
 - 인권에서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과제에서 다문화가족 문화예술사업, 인식 개선 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운영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우수인력 지역정착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통합에서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과제를 추진하며,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 향상 마일리지 제도, 아버지 학교 운영, 전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함
 - 인권에서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과제를 추진하며 문화지원사업과 재외동포 국제교류자문관 활동 등을 지원함

표 20 국내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및 지역정책 사례 요약

구분	유치 정책		지역정책 정책			
	기본 방향성	추진 계획	통합		인권	
			과제	사업 내용	과제	사업 내용
경북	(공동) 지역 특화 비자 사업 참여 (법무부)	광역 비자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외국인 한국어 교실,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금 및 자녀양육수당 지원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고려인주민자녀 맞춤형 돌봄지원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 결혼이민여성 출산도우미 지원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외국인 근로자센터 보조금 지원
			이민자의 지역사회참여 확대	결혼이민자 모국 봉사활동		
강원	(공동) 지역 특화 비자 사업 참여 (법무부)	특별법 기반의 비자 특례부여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결혼이민여성 직업훈련 및 자립기반 강화, 찾아가는 언어평가, 사후교육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문화예술사업,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운영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고려인주민자녀 맞춤형 돌봄지원		
전북	(공동) 지역 특화 비자 사업 참여 (법무부)	특별법 기반 특정 지구·단지 비자 특례부여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 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전라북도 외국인 현장상담소 운영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다문화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다문화가정 한국문화 체험
			이민배경 자녀 역량강화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아버지학교 운영		
			이민자의 지역사회참여 확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다문화정보공유 프로그램 제작지원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재외동포 및 국제교류자문관 활동 지원

2) 해외 사례

□ 우수인력 유치 정책

-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수의 국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사한 저출산·고령화 등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인력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외국인 이민자의 능력에 따른 비자 구분을 통해 고급인력 유치에 집중된 형태임
 - 반숙련 노동자에게도 노동을 위한 비자가 발급되지만 타 비자와 달리 영주권 및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체류기간이 2년으로 일반 노동자에게는 유인이 높다고 볼 수 없음
- 일본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외국인 인력 유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요양직종도 포함하여 자국 내 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대처하고 있음
 - 동시에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특정기능제도 도입 등을 실시하며 외국인 인력 확보에 대처하고 있음
 - 체류기간은 최장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긴 체류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4개월, 6개월, 1년 등의 체류기간 갱신이 가능함
- 스웨덴은 고용주가 필요한 기술 분야에 대해 외국인 우수인력을 초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으며, 2년의 체류기간과 연장 시 최장 4년의 체류기간을 허용함
 - 취업이민자는 실직 시, 3개월 내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비자 허가가 종료되는 엄격한 조건이 존재함
- 핀란드는 노동자 능력 중심과 엄격한 이민심사 및 인터뷰를 적용하여 단순 노동자의 유입은 제한하나 조건을 충족하거나 고숙련 노동자에게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이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수인력 지역정착 정책

- 외국인 우수인력 정착을 위해 해외 국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비자에 따라 가족 동반 기간 등에 차등을 두고 있어 외국인 인력 중에서도 고급인력에는 지역정착에 강한 유인으로 작용하지만, 반숙련 노동자는 가족 초청이 제한되어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볼 수 없음
- 일본은 출입국재류관리청 내 체류관리지원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연계하고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와 체류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사업을 수행함

- 정주외국인 취업지원 코스 사업을 통해 정착에 필요한 언어, 노동법, 사업체 견학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 외의 요소들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
- 스웨덴은 이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와 사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핀란드는 합법적 거주 자격이 부여된 외국인 이민자에게는 차별 없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분야에서 이들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 개별 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함

표 21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정책 해외사례

구분	유치 정책		지역정책 정책	
	기본 방향성	특징	기본 방향성	특징
싱가포르	외국인 우수인력 능력에 따른 비자발급	비자에 따른 체류기간 제한(체류기간 최대 2년)	비자에 따른 가족동반 기간 차등	반숙련 노동자는 가족동반 초청 제한
일본	산업분야 전반적인 외국인 인력 유치	체류기간 최장 5년과 부분적으로 갱신 가능	언어, 노동법 등 취업 활동 외의 요소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지자체와 연계한 사회서비스 제공 행정 구축
스웨덴	산업수요에 맞는 우수인력 유치	재취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허가 취소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서비스 적용 체계	지자체와 연계한 사회서비스 제공 행정 구축
핀란드	노동자 숙련도에 따른 이민 이원화	고숙련 또는 인터뷰 충족 시, 절차 간수화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서비스 적용 체계	외국인 인력을 위한 지자체 코디네이터 고용 /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시행

V 결론

1. 연구 요약

- 본 연구는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전라남도의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변화하는 외국인 정책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외국인 유입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특히 현행 비자체계에 따른 전문 외국인 근로자 중 특정활동(E-7)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의 유입 및 정착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전라남도의 등록외국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라남도의 등록외국인 비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이후 등록외국인 비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크게 증가함
 -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영암군이 등록외국인 수와 증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을 살펴본 결과 비전문취업(E-9)이 가장 많으며, 비전문취업(E-9) 중에서도 제조업(E-9-1)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을 살펴보면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통해 외국인 유입 및 정착을 추진하면서 사회통합과 경제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 지원정책과 다문화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청년이민국 신설과 함께 외국인 유입 및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남도의 외국인 현황 및 외국인 정책을 살펴본 결과 전라남도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증가하는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전라남도의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 지원 및 다문화 지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중 우수인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방안을 제시하기 전 외국인 우수인력 수요를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의 빈일자리 및 빈일자리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빈일자리 및 빈일자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운송장비 제조업의 빈일자리 및 빈일자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과거 빈일자리 자료를 토대로 향후 빈일자리를 추정한 결과 2024년부터 빈일자리가 증가하며, 특히, 2025년 및 2026년에는 빈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므로 외국인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라남도는 기회발전특구, 혁신성장거점 육성 등 창조적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재생에너지, 우주항공산업,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선 등의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구구조의 불균형 심화로 외국인 우수인력 수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
 - 특히 전라남도의 주요 성장산업인 조선업에 대한 외국인 우수인력과 농어촌 지역의 계절 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해당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우수인력 수급을 결정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해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유입된 우수한 외국인력이 전라남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최근 외국인 정책이 근로자 유입 중심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중심의 정착 및 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유입된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함
 - 현재 외국인 근로자 및 우수인력이 국내에 정착하기 어려운 원인으로는 언어 문제와 함께 가족 관련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우수인력이 유입되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맞춤형 정책설계와 사회 통합에 대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전라남도의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 정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사례는 경상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외 사례는 싱가포르, 일본, 스웨덴, 핀란드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내는 외국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체류 기간 연장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다문화 가족 지원, 결혼이주여성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보호, 국제교류 활동 지원 등 인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력 유치를 위해 체류 기간 연장, 이민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동반, 사회서비스 제공, 언어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해 전라남도는 외국인 우수인력의 유입을 위해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가족 초청 및 절차 간소화 등의 비자 제도개선과 함께,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2. 전라남도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정착을 위한 제언

1) 외국인 정책 개선방안

□ 외국인 유치 및 지역정착 지원 방안

- 전라남도의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정착을 위한 방안은 국내·외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및 정착 사례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유치방안과 지역정착 방안을 구분할 수 있음
- 전라남도와 외국인 정책환경이 유사한 경북, 강원, 전북 사례와 함께, 싱가포르, 일본, 스웨덴, 핀란드의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방안은 비자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지역정착 방안은 외국인 우수인력 생활환경 개선 등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 가족 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라남도의 외국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광역비자 도입 재입법을 추진과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함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등록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서울이며, 외국인 우수인력은 일자리 수 및 생활환경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함
 -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방안인 외국인 우수인력 능력에 따라 체류기간 제한 및 갱신 가능, 노동자 숙련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실현되면 일자리 수 및 생활환경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도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전남을 포함한 경북, 강원, 전북 등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다만, 지역특화형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영향으로 획일성 및 경직성이 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전라남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개선 및 특례 부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지역특화형 비자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광역비자의 도입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²⁸⁾
- 외국인 우수인력이 전라남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중심의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우수인력 정착 정책 검토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외국인 전문인력은 국내 혼자 살고 있는 비율이 50% 이상이며, 외국인은 언어와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한국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인식함
 - 따라서, 유입된 외국인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초청 문제해결과 함께,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국내 사례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외국인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실,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금,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외국인 상담소 운영,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등의 통합 정책과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8) 지역특화형 비자 개선방안 및 광역비자 도입 재입법 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비자제도 개선방안에서 다룸

- 해외 사례에서도 외국인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동반 초청, 언어 관련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함
-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외국인 정책으로 다문화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다문화 정책 유지와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내국인 대상 인식개선 교육 확대, 내국인-외국인 어울림 지원사업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즉,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및 지역정착 방안은 비자제도 개선에 따른 유입된 우수인력이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부터 정착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주요 정책 분야별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및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경제 분야는 산업별 빈일자리 개선을 위해 지역별·산업별 외국인 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전라남도-대학 간 외국인 유학생을 유입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안전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및 의료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 통합 분야는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 내국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의 현실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협력/인프라 분야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도-시·군-민간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외국인 정책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전국 광역자치단체 간 연합을 통한 지역 특화형 비자, 광역비자 도입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실태 및 수요조사 실시

- 중앙정부의 제1차~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에 대한 인권, 복지, 생활, 통합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전라남도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전라남도는 독자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전라남도 지역별·산업별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통계청에서는 매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통해 가구특성 및 주거형태, 고용, 구직경험, 교육, 소득 및 소비, 한국어 능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인 실태는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함
 - 따라서, 전라남도는 독자적으로 체류 및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3년 또는 5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외국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응답자 특성,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등이 포함된 일반항목과 함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건강, 소득 및 주거, 노동, 외국인 정책 인식 분야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가족 분야는 혼인 및 자녀 여부, 자녀의 학교 재학 및 학교생활의 문제점, 가족관계 만족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야 함
 - 건강 분야는 외국인 본인 및 가족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과 함께, 병원 이용 유무 및 이용의 어려운 점, 한국생활의 스트레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인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야 함
 - 소득 및 주거 분야는 소득 수준, 주거 형태, 소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야 함
 - 노동 분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부당 근로 경험, 근로 환경, 직장 내 괴롭힘 및 동료 간 관계, 직업 만족도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야 함
 - 외국인 정책 분야는 중앙정부,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시·군의 외국인 정책의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야 함
- 다만, 외국인 실태조사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객관식 문항의 실태조사와 함께 소통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외국인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별 및 집단 심층 면접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제3장 전라남도 시·군별 및 산업별 빈일자리 및 인력수요 검토 부분에서 도출된 내용과 같이 전라남도는 시·군은 2024년 이후 빈일자리가 증가하여 외국인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운송장비, 기타 기계장비 및 장비제도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도 빈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라남도는 지역별 및 산업별 외국인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외국인 우수인력을 사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시·군별 및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조사 실시가 필요함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를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입 방안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란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추진 체계로 2023년~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2025년 전국으로 도입할 예정임
 - 2023년 3월부터 RISE 시범지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은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전북, 충북과 함께 총 7개 RISE 시범운영 지역 중 하나로 포함됨
 - 2025년부터 도입될 RISE 사업에서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 및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반영하여 대학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대학을 지원함
 - 따라서, 전라남도는 지역 대학교와 협업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교육부, 2023)
- 전라남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간 취업연계 프로그램 설계 및 확대가 필요함
 - 전라남도는 미래첨단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산업과 함께, 조선·철강·화학 등 제조업이 발전한 지역으로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대학 간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력 강화 및 지역 인구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추진과 함께,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이 전라남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대학교를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학위를 취득한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중 전라남도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전라남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거주공간,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전라남도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인근로자와 소통이 부족하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유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대학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수도권 및 국·공립대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전라남도 대학에 유치하기 위해 전남 대학의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와 함께, 대학교 내 관광-유학 연계 프로그램 (1달 살기 프로젝트 등), 어학연수 프로그램, 관광·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전라남도 지역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함

□ 도-시·군-민간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전라남도는 2024년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과 함께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이민정책 선도를 추진함
 - 하지만, 외국인 우수인재 수요, 산업 특징, 외국인 주민 실태 등의 파악은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과 함께, 전라남도 22개 시·군 및 민간이 협력하여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는 외국인 우수인력 유치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 방향성 수립,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도적 개선 노력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라남도는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전라남도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 지원 및 다문화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제, 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므로,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해 경제, 협력 등의 분야에 대한 외국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
 - 전라남도는 외국인 정책 및 인력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라남도 22개 시·군 및 민간단체와 수직적·수평적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외국인 실태조사는 시·군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수평적 연합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및 광역비자 도입 재입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외국인 정책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시·군 간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요 및 외국인 주민의 생활 실태에 대해 광역인 전라남도보다 현실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지역 및 산업의 특성이 차이가 있으므로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남도가 일괄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각 지역에서 외국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전라남도 내 외국인 관련 다양한 민간조직, 센터 등은 전라남도 및 시·군이 외국인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 간 소통 활성화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전라남도 내 다수의 민간조직은 외국인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정책 개선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2) 비자제도 개선방안

□ 지역특화형 비자 개선방안

- 지역특화형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획일성 및 경직성이 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을 유치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함
 - 전라남도는 출산율 및 출생아수 감소, 노인인구 증가,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전라남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외국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전라남도는 2026년 강진군에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 고교 유학생(기계, 전기·전자, 보건간호과 등) 약 360명의 유입이 예상되므로 고교 유학생의 체류기간 및 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특례 부여 추진이 필요함
- 첫째,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D-4-3)에도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R코드)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전라남도 강진군은 국제직업고등학교가 설립되어 고교 유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 및 지역특화형 동포 비자(F-4-R)와 같이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D-4-3)에도 지역특화형 비자 유형을 신설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존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3)은 1년마다 비자 갱신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지역특화 고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D-4-3-R) 신설을 통해 성실한 1학년 고교 유학생에게는 체류기간을 2년 연장하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이후 우수한 고교 유학생이 졸업 후 전라남도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체류 자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이 필요함
 - 성인 외국인근로자는 근로현장에서 언어소통의 한계로 장기체류 비자 전환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으나, 고교 유학생은 문화적 이해 및 언어 습득 능력이 성인 외국인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지역사회에 적응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여 사회통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 고교 유학생 유치가 필요함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D-4-3)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시·도지사 지정 직업 고등학교 졸업, 관련 자격증 취득, 학교장 추천 등)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로 전환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광역비자 도입 재입법 추진

- 광역비자는 2022년 12월 19일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 등이 「출입국 관리법」(의안번호 211924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2119246)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안함

- 광역비자는 지방의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지역특화형 비자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제21대 국회 임기가 2024년 5월 29일 종료되어 자동 폐기됨
- 따라서, 전라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광역비자의 신설 및 도입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추진이 필요함
 - 지역특화형 비자의 한계점으로는 지역 우수인재 요건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한국어 능력, 학위 및 소득 기준 등의 기준의 엄격성 등 발급 요건이 전국 지자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또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정책대상을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한정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해외인력을 유치할 수 없으며, 최종 외국인 선발 쿼터를 법무부가 결정함
 - 즉, 지역의 주력산업별 필요한 외국인이 다르며, 지역에 필요한 우수인력은 지자체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나 지역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함²⁹⁾
- 전술한 지역특화형 비자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임의자 의원 등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광역비자 도입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광역자치단체를 체류범위로 하는 광역비자(광역사증)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광역사증(광역비자)을 법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는 방안과 외국인 우수인력의 배우자·부모·자녀에 대해 사증발급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추가로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자격의 획일성 및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비자의 설계 권한(자격기준,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로의 이양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29) 자료 : 한국대학신문(2024.3.24.). 제22대 국회서 '광역비자' 신설·도입 이뤄져야...“중앙-지방” 비자 발급서 역할 분담”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1051>

- 다만, 광역비자 신설 및 도입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함
 - 첫째, 비자발급은 법무부장관 사무로 규정된 국가의 고유사무이며, 이민정책 선진국에서도 지방정부가 비자발급 권한을 갖는 사례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규정 개정을 위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함
 - 둘째, 광역비자 도입의 취지 및 방향성은 중앙정부-지자체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중앙-지방간 협의가 부족한 상태이며, 광역비자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연구가 필요함(류형철, 2023)
- 따라서, 전라남도는 광역비자 도입의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위기를 겪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간 연합을 통한 입법화 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 지역 특성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정책연구와 함께 광역비자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홍보 및 주민 간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국내 및 해외 문헌

- 강원특별자치도. (2024). 2024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4). 도,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 발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3). 외국인 핵심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 교육부. (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류형철. (2023). 광역비자 도입의 실효적 추진방안. 경북연구원 CEO BRIEFING. 제701호.
- 박현욱·주희진. (2022). 인천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22-18.
- 법무부. (2022a).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고문. 법무부 공고 제2022-237호.
- 법무부. (2022b).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제도 안내.
- 법무부. (2023).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
- 법무부. (2024).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 전라남도. (2024). 전라남도 주요 업무계획 2024.
- 전라남도 보도자료. (2024).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시군 전국 최다. 2024.3.9.
-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4).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인구감소 전지역 추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4년 1월호.
- 통계청. (2023a). 2023년 12월 및 5분기 인구동향.
- 통계청. (2023b). 이민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통계청. (2024). 2024년 2월 인구동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3). 주요국 해외 우수인력 유입제도.
- 한국은행. (2024). 1/4분기 전남 서남부 지역 경제동향.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규모 산정.

법령 및 관련 규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245)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9246)

웹사이트

- 경상북도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cmd=2&Start=0&B_NUM=398622501&B_STEP=398622500&B_LEVEL=0&key=4&word=&p1=0&p2=0&V_NUM=8701&tbbcode1=bbs_bodo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erviceInfo/newContrainDataDetail.do?boardIdx=1968001&boardOrgId=1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90397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2.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52>
- 전남도청주민등록·추계인구 <https://www.jeonnam.go.kr/M4695/boardList.do?menuId=jeonnam0508070000>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

외국인 우수인력 유입 및 지역정착 지원 방안

발간종류	정책이슈리포트
발행일	2024년 6월 3일
저자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화	033-769-9999
홈페이지	http://www.krila.re.kr